

시멘트·콘크리트 관련 주요 뉴스 및 단신



중국, 시멘트 등 과잉생산 업종 본격 구조조정 추진

중국 국무원이 시멘트를 비롯해 철강, 선박 등 일부 산업분야에 대한 생산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심각한 과잉생산의 모순을 없애는 것에 대한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노컷뉴스가 외신을 인용해 10월 16일 보도했다.

국무원은 '지도의견'에서 발전단계, 발전이념 등 여러 요소로 일부 산업에서 과잉생산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맹목적으로 산업생산을 확장하는 것을 지양하는 대신 시장기제 작용이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새로운 생산프로젝트 증설 금지를 비롯해 낙후한 산업생산 도태, 기업 합병·재조직 촉진, 국내 유효수요 개척, 수요구조 개선 등을 제시했다. 특히 시멘트, 철강, 전기알루미늄, 판유리 산업 등에 대해서는 에너지 소모량, 전기 소모량, 물 소모량 등이 산업기준에 미달할 경우 징벌적인 요금 부과해 관련 산업의 생산능력을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우선 2015년 말까지 각 지역별로 시멘트 1억톤 등 낙후 생산설비를 도태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공업화, 도시화, 정보화, 농업현대화 등의 진척에 따라 국내 유효수요를 키우고 시장메커니즘을 활성화해 일부 과잉생산능력을 흡수할 방침이다. (노컷뉴스 10월 16일)

온실가스 감축 설비 투자에 금융·세제지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나 기술을 투자·개발하는 업체에 금융·세제와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고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국가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할당 목표를 세워놓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만큼 탄소배출권을 사야 하는 제도다. 기본계획은 2015년 1월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법안에 따라 1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계획안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말 계획을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산업계 부담 최소화를 위해 효율성·형평성·합리성 원칙에 따른 국내 산업 자원 대책을 기본계획안에 담았다. 온실가스 감축 설비와 기술에 투자·개발하면 금융·세제, 보조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거래제 시행 이전 감축량을 조기감축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에는 배출권을 전액 무상 할당하고, 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과 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에는 각각 97%, 90% 이하를 무상 할당할 계획이다. 배출권 거래제 적용 대상은 3년 평균 기준 CO₂ 12만5,000t 이상 배출업체 또는 2만 5,000t 이상 배출사업장으로 정했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물가는 0.25~0.48% 가량의 상승률을, GDP는 0.18~0.61% 가량의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에너지 가격은 0.82~1.88%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 저소득층 가정 지원책 마련, 생산비용 증가 부문 지원 등에 나서고 배출권 국제 연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 할당 기준, 이월·차입·상쇄 등 세부 운영기준은 내년 6월 환경부가 발표할 할당계획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12월 17일)